

# ‘귀농 대세라는데...’ 안일한 ‘농도’ 전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전남도만의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과 귀농귀구의 초기 정착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농촌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감안한 농업연계 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일 전남도로부터 의뢰받아 연구·발표한 ‘FTA 대응 중간 용역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남도가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농촌지도기구가 운영하는 전국적·표준적

## 농업인 교육·귀농정책 등 연계 미흡 전국적·표준적 프로그램에만 의존

프로그램에만 의존하고 지방 고유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농업인 교육훈련 시책의 차별성, 독자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농업학교 등 전문직업교육기관, 일반적 귀농 등 두 가지 경로에서 전남도에 정착한 신규 귀농 인력의 규모에 대한 전망이 미흡하고 영농기반과 지식·정보·기

술·교육훈련 지원 정책 사업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귀농귀구의 영농 정착 초기 단계의 정책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에서 귀농귀구 유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약 57%를 차지해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고 친환경 실천농가가 약 35%로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보급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면적 중 수도작(水稻作) 비중이 약 53%를 점유하는 등 농가의 영세성 및 고비용으로 경쟁력 한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의 융·복합화 미비와 파급 효과 창출이 한계에 직면해 농산물 물류비 과다 소요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 수출기반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chadol@

## 광주에 천문대 들어선다

### 2018년까지 ... 부지 물색 중

광주시가 천문대 건립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9일 청소년의 천체 탐구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한 광주천문대를 오는 2018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문대는 장흥·곡성·보성·고흥 등 전남지역 3곳을 비롯해 전국에 70개가 있으나 광주지역은 정식 천문대는 없으며 다만 국립광주과학관과 빛고을청소년수련관에 소규모 천체 관측 시설이 있을 뿐이다.

광주시는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이나 광산, 북구 등 광주 인근 야산지역을 중심으로 천문대 부지 물색 중이다.

전체 부지는 1천300㎡에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문대

에는 교육체험관, 테마전시실, 주·보조관측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천문대 건립되면 과학 도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신비한 천체 현상과 우주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9월 빛 공해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별을 순수하게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가고, KTX 개통에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조선대 지구과학과 겸임교수인 박종철 이학박사에 따르면, 세상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인 카노프는 남쪽 지방에서 5도 정도 높이에서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데 광주지역이 그 최적지다. /채희종기자 chae@

## ‘빛고을 상징버스’ 11월 광주도심 누빈다

### 5·18 등 광주 상징물 부착

11월부터 광주를 상징하는 ‘빛고을 상징버스’가 운행된다.

광주시는 19일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부착된 이른바 ‘빛고을 상징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버스에는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5·18이나 기아차를 모델로 한 어린이 만화 캐릭터 등을 차량 외부와 내부에 랩핑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일부 버스는 예술작품을 부착한 문화 버스로 단장할 예정이다. 5000만원을 들여 우선 10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버스는 관광용

이 아닌 정규 노선, 특히 주요 거점 지역을 운행한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개발한다.

대부분 시내버스가 상업광고를 부착하고 있지만 이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상징물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버스에 부착되는 만큼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디자인 개발을 마치는 대로 설치와 운행에 들어가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시, 주민세 인상분 등 106억 청년일자리 창출 투자

광주시가 주민세 인상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1999년 이후 세율이 인상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도 1992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올해 시세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를 현실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45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인사업자분은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법인분은 자본 규모 등에 따라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주민세 인상분 47억원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59억원 등 106억원의 추가 확보된 재원은 청

년일자리 창출과 시민이 원하는 편익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비교제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올해는 의료급여수급자까지 확대하고, 2016년 이후에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해 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비교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다.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 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송정역 출입구 캐노피 새 단장

광주도시철도 광주송정역 4번 출입구 캐노피(비가림 덮개)가 새롭게 단장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 광장에 설치돼 있는 4번 출입



구 캐노피를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새롭게 단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왼쪽은 현재 출입구, 오른쪽은 단장 후 출입구) 공사는 디자인 공모를 통해 지난 11일 (주)광주공간건축사사무소와 ‘Studio Mendini’가 공동으로 제출한 ‘빛의 꽃(Light Flower)’ 작품을 선정, 연내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北, 우리측 확성기 방송시설 타격 훈련

### 문재인 “남북 서로 자극 말아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사건 이후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은 남측 확성기 타격을 노린 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9일 “북한군이 최근 DMZ 군사분계선(MDL) 일대 소초(GP) 등에서 남측을 향한 총안구(뚨을 숨기고 사격하기 위해 뚨은 구멍)를 개방한 것이 자주 관측된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고사총을 비롯한 화기를 언제 든지 남쪽으로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군이 지난 10일부터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타격을 노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군은 평소 GP 총안구를 닫아두지

만 이를 열 경우 우리 군은 사격 준비 신호로 간주하고 대응 사격 준비를 하는 등 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한다.

그러나 북한군이 실제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타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아직 낮다. 오는 28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인 울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인 만큼 남북간 사소한 무력충돌도 견딜 수 없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남북은 상대를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단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문제를 군사적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북한도, 5·24 조치를 그대로 둔 채 통일대박을 외치는 우리 정부 모두 정답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연합뉴스

## 檢, 권은희 의원 기소... 김용판 재판서 ‘위증’ 혐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광주 광산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진 부장검사)는 19일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행위이다.

권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하급심 증언과 관련해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이 현재에 있을 때 수사 수사 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냈던 권 의원은 공판

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로 핵심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충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청장이 하급심에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 자유정년연장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작년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경찰서 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지시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게 아니라 수사 단서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보충 조사를 벌인 결과 수사경찰서 수사팀이 확보해 놓은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더불어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 더불어사는 넉넉한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 광주광역시 100대 명품강소기업을 육성합니다.

### 명품강소기업이란?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매년 선정하는 중소·중견기업

### 선정개요

규모	2014~2017년(4년간 100개 기업)
대상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자격	· 매출액 50억 이상(지식서비스업은 10억 이상) · 최근 5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율 1% 이상
절차	공고 → 심사(서류, 현장실사) → 선정 → 지원사업 추진(기업진단, 맞춤형기업지원) ※ 2015 명품강소기업 선정 8월중 공고예정(광주테크노파크 602-7223)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직접지원	자금지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구조고도화자금 및 수출진흥자금 우대지원
	종합경영진단 컨설팅 · 경영진단 및 컨설팅 · 기업법 최적의 성장전략 도출
	맞춤형 지원사업 · 경영컨설팅 결과에 의한 맞춤형 연계 지원
전담 코디 운영	· 1사 전담 코디네이터 지정으로 책임 육성
연계지원	· 지역 내 유관기관 기업지원사업 우대지원
기타지원	· 명품강소기업 인증 환원 제공, 인력 매칭 지원 등